

환경부, 포스코 페놀 누출 “은폐”

사고 발생 26일 지나 누장대응 ... 감사원 감사에 책임자 문책 요구

환경부가 4월 강릉 옥계 소재 포스코(대표 정준양) 마그네슘 제련공장에서 발생한 페놀(Phenol) 유출사고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폐수 유출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사고 발생 후 20여일이 지난 후에야 대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6월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3개월간 포스코 옥계제련공장의 폐수가 유출됐다고 고발했으나 포스코 옥계제련공장은 4월21일-24일까지 4일간만 누출됐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 고발장에는 페놀 등이 혼합된 폐수누출 추정량이 353.7톤인 반면 포스코에서 파악한 누출 추정량은 15.7톤에 불과했고, 응축수에 혼합된 페놀은 기준치인 리터당 5mg보다 762배 높은 3812mg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누장대응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확산된 정황도 포착됐다.

6월2일 사고접수 후 26일이 지나서야 토양오염 확산방지 조치가 내려졌고, 또 일주일이 지나서야 토양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차수막 설치가 완료됐다.

심상정 의원은 “사고가 접수된 지 140일이 지났지만 환경부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동해해양경찰서가 검찰에 제출한 서류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포스코 주장만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 페놀함유 폐수 누출사고에 대해 정부가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토양오염 확산 방지 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해 대응했는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누장대응으로 오염을 확산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22>